

##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강유진<sup>1)</sup>

---

### 요약

---

본 연구는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에 따라 출산계획유형을 무자녀, 한자녀, 다자녀 집단으로 나누고,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25세-39세 무자녀와 한자녀 기혼여성 1,93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출산계획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자녀집단'이었다. 둘째, 출산계획유형을 구별하는데 일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가족가치관요인이었다. 다자녀집단은 한자녀집단에 비해 자녀가치관이 좀 더 전통적 특징을 보인 반면, 무자녀집단은 한자녀집단에 비해 부부간 평등성의 측면에서 좀 더 부부중심적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정책이 가족 별 다양성을 고려하고, 변화된 가족가치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창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출산계획유형, 자녀가치관, 부부평등성

---

## I. 서론

우리 사회 출산율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0.98명으로 합계 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이후 2019년 우리 사회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박시내, 2020).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출생아수는 74,050명으로 전년 동기 비 무려 11.0%가 감소하였으며 2020년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19년 보다 더 낮아진 0.90명이었다(통계청, 2020).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

---

1)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에 머무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면서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시작으로 하여 매 5년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출산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왔다(양영철, 2019).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부담과 비용부담이 손꼽히면서 각종 자녀양육·교육지원정책 및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과 보육시설과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더욱 암울한 전망은 세계적으로 앞서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들 중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양영철, 2019). 그러나 정책적 차원의 노력의 강도가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1명대가 무너지는 모순적 상황, 그리고 출산률 하락이 끝도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때 보다 고민이 깊어진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과연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은 유교이념의 테두리에서 당연한 삶의 통과의례로 존중받았다. 유교적 가족이념은 혈연의 계승을 통한 가문의 영속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전통 사회에서 ‘부모됨’이란 누구나 거쳐야 하고, 개인이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사회적 역할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Yang & Rosenblatt, 2008).

반면, 초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만혼화와 출산연기, 출산포기가 꼽히는 점(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차승은, 2008),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부모 됨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주혼인 연령은 25-29세에서 30-34세로 점차 늦춰졌는데, 이러한 만혼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출산 연령 역시 30-34세로 늦춰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배혜원, 2017). 즉,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다자녀출산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이완·채재은, 2017).

또한 2018년 전국 자료에 의하면, 20-44세의 미혼인구 중 미혼 남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8.9%로 나타났으며, 미혼 여성의 경우 이 응답의 비중이 전체의 48.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2019). 이는 2015년 동일 조사에서 미혼 남성의 17.5%, 미혼 여성의 29.5%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에 동

의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불과 3년 사이에 자녀출산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오늘날 자녀출산은 더 이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당위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가치로 위상이 변모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젊은 세대의 출산행동은 '최소한 한명 이상의 자녀'에서부터 '무자녀'까지로 연결되는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있으며, 개인이 만들어가는 가족형태의 복잡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최소한 한자녀 이상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 출산 여부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양육부담에 주로 집중된 경향이 다. 따라서 변화된 자녀출산의식과 가족가치관, 다양해진 가족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무자녀까지 포함한 성인 세대의 출산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시점이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과 개인적 차원에서 출산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특징,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출산행동을 연결시켜서 개인의 출산행동에 관련된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살피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첫째, 출산정책 연구들은(유계숙, 2009; 이명석·장한나·이승연 외, 2012; 이미옥·명성준, 2015; 이철희, 2018) 오랫동안 출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출산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둘째, 개인의 출산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집중되었다. 추가 출산계획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등 사회인구학적·가족적 요인을 살피는 연구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배정연·홍석자, 2010; 송유진, 2014; 주효진·곽경희·조주연, 2010; 차승은, 2008)과, 개인-가족-정책 등 다양한 생태체계적 맥락과 연결시켜서 개인의 출산을 복합적 원에서 살펴본 연구들이(배광일, 2015; 배광일·김경신, 2011; 배광일·김경신, 2012; 서정연·김한곤, 2015; 이완·채재은, 2017; 최지훈·안선희, 2018) 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개인의 출산행동에 작용하는 개인적 특성과 거시적 특성과 이들의 복합적 관련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이 연구들은 무엇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더욱 유효한지, 추가출산 행동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 등을 주목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해법을 찾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자녀 이상을 출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혹은 한자녀 이상 가족들의 추가 출산의도에 초점을 맞춘 경향

이다. 또한 출산의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현재 자녀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여러 독립변수들 중 하나로써 고려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녀수와 출산의도는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써 구분되어 분석된 경향이다.

오늘날 0.92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고려한다면, 현재 자녀수를 무자녀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만들어어나가는 좀 더 다양한 출산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출산계획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무자녀를 포함하여 개인의 다양한 출산패턴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이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 연구들이 미흡하며, 여전히 기혼 성인들이 한명이상의 자녀출산을 할 것을 전제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경향이다. 또한 최근 무자녀 가족을 주목하고 다양한 가족패턴을 심층 분석하려는 연구들(공미혜·이수연, 2012; 권영인, 2014; 김정미·양성은, 2013;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 이민아, 2013)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거나 특정 지역의 소수의 집단에 연구결과가 국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출산패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자녀 중심적 가치가 퇴색되고 자녀출산에서의 선택적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혼 성인세대의 출산계획 실태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복합적인 맥락이 이러한 다양한 출산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피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무자녀를 포함한 현재 자녀수를 중심으로 향후 출산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출산계획유형’이라 명명하고, 출산계획유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자녀가 없음에도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한자녀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양한 출산행동을 이끌어내는 맥락들은 서로 상이할 것이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개인의 특징 역시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자녀수만이 아니라 향후 출산계획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출산계획유형을 예측하는 것은 단지 현재 자녀수로만 알 수 없는 향후 출산연기, 출산포기 등 다양한 출산행동의 의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무자녀가족, 한자녀가족, 두자녀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처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통해 출산계획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영향 요인들이 보고되어 왔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빠른 고령화 진행,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 환경적 변화들이 젊은 세대가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을 결심하기 부담스러운 ‘가족과부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된다(송

다영, 2013). 또한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여부 등 개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완·채재은, 2017; 장한나·이명석, 2013).

가족가치관 역시 출산결정에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배광일·김경신, 2011; 이완·채재은, 2017; 서정연·김한곤, 2015; 차승은, 2008)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즉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출산의도와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상자녀수 역시 출산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은 이상자녀수를 2명이상으로 고려하는지가 추가 출산계획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 내 부부간 역할에 대한 성평등 인식도 출산행동과 관련이 있다. 서구의 연구들은(McDonald, 2000, 2006; Mills, Mencaroni, Tanturri et al., 2008) 출산행동은 단지 여성의 행동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동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저출산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가족 내 성평등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성평등 인식이 중요한지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일-가족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기혼 직장 여성들이 자녀출산을 꺼릴 수 있으므로, 남편의 가사분담과 집안일 참여의 공평성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박수미; 2008; 송유진, 2014; 신인철, 2009; 장한나·이명석, 2013; Anderson & Kohler, 2015; Duvander & Andersson, 2006; McDonald, 2000).

정리하면,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출산계획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출산계획의 다양성을 이끌어내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가치관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무자녀까지 포함한 현재 자녀수를 향후 출산계획과 연결시킨 출산계획유형을 분석의 중심에 둘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의 전반적 특성이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 사회 가임기(15세-49세) 기혼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 행태 및 가족가치관과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조사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15-49세) 11,207명의 자료 중 25세-39세 기혼여성 5,229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녀수가 0명과 1명인 2,317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전체 출산아수 326,822명 중 모 연령이 25세 이상 39세미만의 출산아수가 299,197명으로 전체 출산아 수 중 약 92%가 집중되어 있다(통계청, 2018). 또한 현재 자녀수를 0명과 1명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자녀수가 2명 이상이라는 응답자 중 대다수(95.6%)가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등 현재 자녀수 2명의 기혼여성들은 이미 출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25세-39세이고 현재 자녀수가 0명 혹은 1명이하인 기혼여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선행연구들(배광일·김경신, 2012; 최지훈·안선희, 2018)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산의 계획과 실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혼여성 집단을 분석의 초점에 두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의 초점은 추가 출산계획을 중심으로 무자녀집단, 한자녀집단, 다자녀를 확고하게 계획하는 집단이다. 이에 출산계획유형으로 현재 자녀수가 0명인 집단 중 자녀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무자녀집단), 자녀수 1명인 집단 중 자녀 출산을 고려하지 않거나(한자녀집단) 추가 자녀출산을 고려하는 집단(다자녀집단)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녀수 0명인 집단 중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경우는 향후 한자녀집단이 될 수도 있고 다자녀집단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출산계획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데 분석의 모호함이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녀수 0명이며 향후 출산계획을 가진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최종 분석된 응답자는 1,933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N(%)
연령	25세이상-30세미만	259(13.4)
	30세이상-35세미만	772(39.9)
	35세이상-40세미만	902(46.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94(20.4)
	전문대학	408(21.1)
	4년제 대학 이상	998(51.6)
	대학원 이상	133( 6.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47(12.8)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71(24.4)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81(19.7)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325(16.8)
	600만원이상	509(26.3)
경제활동여부	그렇다	987(51.1)
	아니다	946(48.9)

## 2.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향후 출산계획유형이다. 이 때 출산계획유형은 조사대상 기혼여성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자녀 출산을 어떻게 계획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출산계획유형은 무자녀를 포함하여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계획 유무를 중심으로 무자녀집단, 한자녀집단, 다자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출산계획 유무의 측정은 질문지의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김정석, 2007)를 참고로 하여 이 질문에 대해 '낳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출산계획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집단이라고 간주하여 출산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낳지 않을 생각이다' 혹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출산계획이 없거나 소극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출산가능성이 낮은 집단으로 간주하고 출산계획을 이분화 하여 코딩하였다.

출산계획유형 각각의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 무자녀집단은 현재 자녀 0명이고, 추가 출산계획에 소극적인 집단으로 현재와 미래에 무자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무

자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한자녀집단은 현재 자녀수 1명이고, 앞으로 추가 출산계획에 소극적 집단으로서 한자녀이상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자녀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분석의 기준집단이다. 다자녀집단은 현재 자녀 1명이면서 추가 출산계획을 명확히 밝힌 집단이다. 이 집단은 앞으로 한 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자녀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 나. 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가치관 변인이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여러 선행연구들(이완·채재은, 2017)을 통해 출산행동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요인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가구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현재 응답자 연령을 그대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취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의 총합이며 이의 응답분포를 300만원미만, 300만원-400만원미만, 400만원-500만원미만, 500만원-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 등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가족가치관 변인은 이상자녀수,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 등 자녀가치관 요인과 가사공평감, 성역할가치관 등 부부 간 평등성 요인 등 두 가지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자녀수에 관한 생각은 기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항으로 간주된다(김정석, 2007). 이에 가족유형 집단 별로 이상자녀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집단마다 자녀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에서 이상자녀수 2명 여부가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던 점과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이상자녀수를 2명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상자녀수 요인을 2명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이상자녀수 2명 미만은 0, 두 명 이상은 1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질문지의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5문항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들(박수빈·김희화, 2012; 이완·채재은, 2017; 차승은, 2008)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점이 출산경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하면서, 자녀에 대한 관점을 크게 정서적 요인과 도구적 요인으로 명명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질문지의 5문항을 '정서적 자녀가치관('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과 '도구적 자녀가치관('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등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서 ‘전적으로 찬성’에 이르기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정서적 자녀가치관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714이고, 도구적 자녀가치관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647이다.

자녀가치관 척도의 5문항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 즉 효용성과 가치를 갖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정서적 자녀가치관은 자녀의 존재를 부모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보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적 자녀가치관은 자녀의 존재가 사회와 가족의 차원, 즉 집단의 차원에서 얼마나 의미를 갖는지를 의미한다.

가사공평감은 질문지의 “귀하는 평소 남편과 가사를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의 응답은 ‘전혀’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분담공평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역할 가치관은 질문지의 ‘가족 내 부부의 역할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4문항 중 성역할태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세 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가족 내 부부 간 역할에 관하여 얼마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질문들의 응답은 ‘전적으로 찬성’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에 이르기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부부 역할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 평등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644이다.

#### 다. 분석방법

자료는 SPSS ver. 2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추가출산계획 유형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계획유형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범주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출산계획유형 별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가족가치관의 전반적 양상

##### 가. 출산계획유형의 분포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자녀수와 추가출산계획을 고려하여 출산계획유형을 무자녀, 한자녀, 다자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한자녀'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62.2%가 해당하였다. 가장 응답비율이 낮은 유형은 '무자녀'로 응답자 중 8.8%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이후 추가 출산계획 까지 고려할 때 조사대상 기혼 성인 여성들은 일단 1명을 출산하면 더 이상 추가 출산 계획이 없이 한자녀만을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2〉 출산계획유형의 분포

출산계획유형	N(%)
무자녀	170( 8.8)
한자녀	1,203(62.2)
다자녀	560(29.0)
총합	1,933(100)

##### 나. 출산계획유형 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 현황

현재 자녀가 0명 혹은 1명인 기혼여성들의 추가 출산계획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가치관 요인들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각 유형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각 유형 별로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과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교육수준으로 파악하였다. 연령의 경우, '무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은 35세-39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 비해 '다자녀집단'은 조사대상의 절반가량(50.9%)이 30-34세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계획유형별 연령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기혼여성 중 현재 자녀수가 1명이지만 추가 자녀출산계획이 확고한 다자녀집단이 현재 자녀수가 0명이든 1명이든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과 비교

할 때 좀 더 낮은 연령대, 특히 3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무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은 ‘600만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이 ‘300만원-399만원’에 속하는 경우이었다. 반면, ‘다자녀집단’은 ‘300만원-399만원’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600만원 이상’ 집단이었다. 그러나 각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참여의 경우 ‘무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반면 ‘다자녀집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이들 집단 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분포는 각 출산계획 유형 집단 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4년제 대학교이상’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위의 가구소득, 경제활동참여와 마찬가지로 각 유형 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출산계획유형 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출산계획유형 N(%)			$\chi^2$
		무자녀	다자녀	한자녀	
연령	25-29세	28(16.5)	103(18.4)	128(10.6)	88.072***
	30-34세	65(38.2)	285(50.9)	422(35.1)	
	35-39세	77(45.3)	172(30.7)	653(54.3)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27(15.9)	78(13.9)	142(11.8)	7.648
	300-399만원이하	37(21.8)	146(26.1)	288(23.9)	
	400-499만원이하	30(17.6)	114(20.4)	237(19.7)	
	500-599만원이하	32(18.8)	81(14.5)	212(17.6)	
경제활동여부	600만원이상	44(25.9)	141(25.2)	324(26.9)	5.911
	그렇다	99(58.2)	268(47.9)	620(51.5)	
교육수준	아니다	71(41.8)	292(52.1)	583(48.5)	10.337
	고등학교이하	41(24.1)	103(18.4)	250(20.8)	
	전문대학 이상	37(21.8)	137(24.5)	234(19.5)	
	4년제 대학이상	83(48.8)	275(49.1)	640(53.2)	
	대학원이상	9( 5.3)	45( 8.0)	79( 6.6)	

\*\*\*  $p < .001$ .

둘째, 조사대상의 출산계획유형별로 가족가치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 보았다. 가족가치관 요인은 크게 자녀가치관 요인과 부부간 공평성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자녀가치관 요인은 이상자녀수, 정서적 자녀가치관, 도구적 자녀가치관요인이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자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그리고 부모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부부간 공평성 요인은 가사공평감과 성역할태도로써 부부간 가사분담의 공평성과 가족 내 남편과 아내역할에 대해 얼마나 성평등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족가치관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먼저 이상자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출산계획유형에 상관없이 대다수 조사대상자들이 2명 이상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현재 자녀수는 0명 혹은 1명을 감안할 때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와 다소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만, 출산계획유형 별 이상자녀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2명 이상의 이상자녀수를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대다수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무자녀집단’(79.2%)과 ‘한자녀집단’(80.8%)에 비해 ‘다자녀집단’(96.1%)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현재 한자녀를 두고 있지만 추가 출산을 통해 두자녀 이상을 계획하는 응답자들의 이상자녀수는 무자녀 혹은 한자녀를 계획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이상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좀 더 확연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치관의 경우 4점 척도로써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도구적 자녀가치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출산계획유형 별 정서적 자녀가치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치관의 측정이 4점 척도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각 유형별 정서적 자녀가치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자녀가치관에 찬성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다자녀집단’(M=3.592)이었고, 그 다음이 ‘한자녀집단’(M=3.3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자녀가치관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자녀가치관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정서적 자녀가치관에 비해 도구적 자녀가치관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자녀집단’의 경우 평균이 2.107로 도구적 자녀가치관에 대한 찬성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이었으나 이 점수 역시 ‘별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사이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에 좀 더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젊은 기혼 세대에게 자녀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대를 잇기 위한 존재, 부모 부양을 위한 존재, 혹은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매우 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부부 간 공평성 요인인 가사공평감과 성역할 태도는 조사대상자들이 남편과 집안 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안일이 아내의 몫이고 바깥일이 남편의 몫이라는 성역할 이분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가사공평감의 경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부부간 가사분담을 대체로 공평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무자녀집단'(M=2.859)이었고 그 다음이 '다자녀집단'(M=2.730)이었다.

성역할태도 역시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각 유형 별 응답평균은 척도 상 '대체로 찬성'의 쪽에 가깝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성역할 평등적 경향을 보인 집단은 '무자녀집단'(M=2.904)이었으며, 그 다음이 '한자녀집단'(M=2.665)이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출산계획유형 별 가족가치관

구분	출산계획유형			$\chi^2/F$	
	무자녀	다자녀	한자녀		
이상자녀수	0명, 혹은 1명	31(20.8)	21(3.9)	217(19.2)	71.587***
M(%)	2명이상	118(79.2)	513(96.1)	912(80.8)	
정서적 자녀가치관(M)		2.957	3.592	3.370	105.497***
도구적 자녀가치관(M)		1.768	2.107	1.891	26.435***
가사공평감(M)		2.859	2.730	2.574	14.570***
성역할태도(M)		2.904	2.635	2.665	12.242***

\*\*\*  $p < .001$ .

## 2.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한자녀, 다자녀를 계획하는 집단들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구분되는지, 즉 출산계획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출산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들의 특징이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무자녀, 한자녀, 다자녀 출산계획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유형 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에서 유형 간 비교 기준은 '한자녀집단'이다. '한자녀집단'과 비교하여 나머지 출산계획유형에 속할 확률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가치관 특성에 따라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독립변수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가치관 요인들은 각 유형들을 구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녀가치관, 부부평등성, 성역할태도 등 가족가치관 요인들에 따라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출산계획유형 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집단'은 현재 무자녀임에도 앞으로도 추가 출산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집단이다. 이 유형과 '한자녀집단'을 구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가족가치관, 특히 부부공평성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자녀가치관, 가사공평감,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자녀가치관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이었다. 분석 결과, '무자녀집단'이 '한자녀집단'에 비해 비해 정서적 자녀가치를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B=-1.161$ ,  $\exp(B)=.313$ ).

반면, 부부 간 평등성의 측면에서는 '무자녀집단'이 '한자녀집단' 비해 평등성을 더욱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남편의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B=.385$ ,  $\exp(B)=1.470$ ), 그리고 성역할을 평등하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B=.494$ ,  $\exp(B)=1.639$ ) '한자녀집단'보다 '무자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다자녀집단'은 현재 자녀가 1명이면서도 앞으로 추가 자녀출산계획을 명확히 표시하여 자녀수 2명 이상의 다자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분석결과, '다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은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을 제외하면 주로 자녀가치관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자녀집단'을 '한자녀집단'과 구분 짓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뿐이었으며, 가족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자녀가치관 요인인 이상자녀수, 정서적 자녀가치관, 도구적 자녀가치관이었다. 반면 부부간 공평성 요인인 가사공평감과 성역할태도는 두 집단을 구분 짓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은 '다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을 구분 짓는 유일한 개인적 특성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다자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B=-.131$ ,  $\exp(B)=.877$ ). 반면, 가족가치관 요인 중 자녀가치관 요인인 이상자녀수, 정서적 자녀가치관, 도구적 자녀가치관 모두가 '다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을 구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자녀수의 경우 이상자녀수가 2명이상인 집단이 '다자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한자녀가족'에 비해 높았다( $B=1.650$ ,  $\exp(B)=5.207$ ). 또한 '다자녀집단'의 경우 '한자녀집단'에 비해 정서적 자녀가치관( $B=.681$ ,  $\exp(B)=1.977$ )

과 도구적 자녀가치관( $B=.227$ ,  $\exp(B)=1.255$ ) 모두에서 이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자녀집단’이 ‘한자녀집단’과 비교하여 자녀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강하게 인지할 뿐 아니라, 자녀의 도구적 가치 역시 다른 출산계획유형에 비해 강하게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5〉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기준집단: 한자녀집단)

변수	무자녀		다자녀	
	$B$	$\exp(B)$	$B$	$\exp(B)$
연령	-.047(.027)	.954	-.131(.017)***	.877
가구소득	-.082(.079)	.921	-.009(.049)	.991
경제활동(그렇다=1)	.308(.214)	1.360	-.099(.133)	.906
교육수준	-.197(.107)	.821	.032(.069)	1.027
이상자녀수(2이상=1)	.172(.229)	1.187	1.650(.241)***	5.207
정서적 자녀가치관	-1.161(.175)***	.313	.681(.125)***	1.977
도구적 자녀가치관	.028(.160)	1.028	.227(.087)**	1.255
가사공평감	.385(.112)**	1.470	.090(.068)	1.094
성역할태도	.494(.169)**	1.639	.044(.103)	1.045
-2LL			2,772.616	
$\chi^2$			329.740***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출산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젊은 성인세대의 출산계획은 무자녀를 포함하여 다양성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출산계획의 형성 과정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개인의 출산행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로 현재 자녀수, 혹은 추가 출산계획 중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한자녀 출산을 전제로 둘째 자녀출산에 주로 주목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출산 연기 혹은 출산 포기의 경향을 함께 살피면서 무자녀에서 다자녀에 이르기까지 출산계획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현재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계획유형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이에 따라 무자녀집단, 한자녀집단, 다자녀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가치관

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자녀수가 0명 혹은 1명인 25세-39세 기혼여성 1,9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계획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가치관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반면, 가족가치관 요인들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을 25-29세, 30-34세, 35-39세로 나누어서 각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은 35세-39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 비해 '다자녀집단'은 30-34세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자녀집단이 현재 자녀수가 0명이든 1명이든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좀 더 낮은 연령대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30-34세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다.

가족가치관 요인은 출산계획유형 별 집단 간 차이가 보다 명확하였다. 이상자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2명 이상의 이상자녀수를 응답하였으나, '다자녀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다자녀집단 중 약 96%가 이상자녀수로서 두 자녀 이상을 응답하였다.

출산율 증진에 관한 선행연구들(공선영, 2006; 배광일·김경신, 2012; 전광희, 2002)은 이상자녀수 혹은 희망자녀수를 주목하여 왔다. 이상자녀수는 자녀출산의도를 실제 출산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몇몇 선행연구들(권영인, 2014; 박수빈·김희화, 2012)은 조사대상들의 희망자녀수 혹은 이상자녀수가 대체로 2명 정도임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간극은 이상자녀수만큼 출산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실제 출산자녀와 이상자녀수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고, 이상자녀수만큼 출산을 이끄느냐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가치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자녀집단'이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을 지지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들과 비교할 때 더욱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자녀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한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적 자녀가치관의 경우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 특히 결혼과 자녀가치관이 변화하여 왔음은 잘 알려져 왔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변화의 주된 방향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출산이 가족과 사회 등 집단의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라는 당위적 신념은 약화되고, 그 대신 자녀가 부모 개인적 삶에 작용하는 효용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출산계획에 따른 무자녀집단, 한자녀집단, 다자녀집단을 구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자녀집단을 분석의 기준으로 하는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을 구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 출산계획유형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각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가족가치관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자녀집단’과 ‘무자녀집단’은 주로 가사공평감, 성역할태도 등 부부간 평등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한자녀집단’과 ‘다자녀집단’은 개인적 특성인 연령과 주로 자녀가치관인 이상자녀수, 정서적 자녀가치관, 도구적 자녀가치관에서 차별화되었다.

셋째, 연령은 선행연구들(김정석, 2007; 배광일, 2015)을 통해 추가 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도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한 무자녀집단과 한자녀집단의 경우 연령이 이 두 집단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다자녀집단과 추가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한자녀집단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한자녀 이상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한자녀 이상 낳지 않겠다는 출산포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출산정책에 있어서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다시 확인하는 대목이다. 최근 결혼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20), 이러한 만혼 현상은 결국 저출산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혼이 늦어지면 자연히 첫 자녀 출산연령도 늦어지는데, 이러한 출산연령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추가적 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기혼세대 뿐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의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고 이들의 결혼행동의 변화까지 주목하는 등 미혼 성인세대의 결혼정책과도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가치관 요인은 각 출산계획유형들을 구별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만, 각 유형별로 중요하게 작용한 가족가치관의 종류는 상이하였다. 전반적으로 무자녀를 계획하는 집단과 한자녀만을 계획하는 집단 간에는 부부간 평등성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한자녀만을 계획하는 집단과 한자녀 이상 출산을 계획하는 집단은 이상자녀수,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 등 자녀가치관요인의 측면에서 차별화되었다. 즉, ‘무자녀가족’은 ‘한자녀가족’에 비해 부부간 공평감과 성역할 평등성이 더욱 높은 경향인 반면, ‘다자녀가족’은 ‘한자녀가족’에 비해 정서적·도구적 자녀가치관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상자녀 수 역시 2명이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더 전통적인 자녀가치관을 보이는 측면에서 차별화되었다.

무자녀를 계획한 집단이 한자녀이상 출산을 계획한 집단에 비해 정서적 자녀가치가 낮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보람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무자녀계획 집단에게 부부공평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공평한 가사분담과 성평등적 경향은 부부만의 삶을 계획하는데 집중하여 무자녀를 결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부 간 성평등성이나 공평한 가사분담은 출산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왔음에도(박수미; 2008; 송유진, 2014; 신인철, 2009; 장한나·이명석, 2013; Anderson & Kohler, 2015; Duvander & Andersson, 2006; McDonald, 2000) 본 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무자녀를 결심한 집단이 오히려 부부 공평성 인식이 높았다는 점은 어쩌면 자녀출산이후 부부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예상과 불신감이 무자녀 계획 집단에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부부공평성 요인을 중시하는 무자녀 부부가 출산 이후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의 측면에서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들의 출산의도가 향상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남성의 적극적 육아참여,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부부 간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출산을 증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며(배혜원, 2017), 이를 통해 무자녀 가족이 중시하는 부부공평성 요인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믿음을 주고 이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한자녀 이상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다자녀집단에서 자녀가치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효과가 통제된다하더라도 자녀가치관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녀출산을 결심하는데 개인의 가치관, 특히 자녀출산과 자녀가치를 중시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점은 저출산정책에 있어서 비용적 측면 이외에도 변화하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우리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 혹은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을지의 출산행동과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유교적 규범에 의하여 일률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개인과 가족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가족가치관, 그리고 사회정책적 지원 등에 따라 출산을 선택적으로 계획하는 선택사항이 되었다(성미애·최진실·이재림, 2015; 장하나·이명석, 2013). 이에 무자녀 가족에서부터 한자녀 가족, 다자녀 가족 등 출산계획은 좀 더 다양해진 경향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작업은 사회의 안정적 미래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해진 출산계획과 행동을 고려하여 성인세대의 출산의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이상자녀수와 현재 자녀수와의 간극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 출산자녀수와 희망자녀수, 혹은 계획자녀수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간극을 유발하는 어떤 맥락과 요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저출산정책은 희망자녀수만큼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족들이 어떠한 정책적 욕구를 표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 간의 간극을 주목하고 이상자녀수에 도달하게끔 하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욕구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족들이 희망자녀수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 유인책을 찾아내고, 이를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출산계획에 작용하는 가족가치관의 역할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출산을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과거 유교적 가족가치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회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저출산정책에 양성평등적 태도, 일-가정 양립 의식, 젠더이슈 등 변화된 가족가치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함을 시사한다.

2017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정책에서의 성평등적 요인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의 추진에 국한될 뿐 여전히 양성평등으로의 인식전환과 구체적 실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송다영·백경훈, 2020). 이에 향후 저출산정책의 큰 틀이 돌봄주체에 대한 양성평등적인 인식 확립 등 젠더이슈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 직장 영역에서 누구나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일-가족 양립정책 확립, 가족 내 성평등성의 증진 노력,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이 저출산 정책의 핵심영역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정책에서 양성평등의식이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는 것은 저출산 지원이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즉 삶의 질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저출산정책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투입되는 비용과 지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정책실현을 위한 협력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자녀의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집단이 자녀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의 가치관이 사회와 별개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개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작업이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양육부담 등 경제적 맥락이 저출산의 중요한 상황적 요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정책이 재정적 지원, 육아 및 양육비 지원 등 복지정책 일변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따뜻한 시선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사회와 직장에서 자녀출산이 존중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가능할 것이다. 즉, 저출산 정책이 단지 출산과 양육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구성원의 출산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인과 학교, 직장 등을 포괄한 다양한 영역들과 연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있어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의 향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정서적 자녀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보다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 다시 말해서 자녀 양육의 양이 아니라 자녀양육 혹은 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삼식, 2016). 향후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과 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교육 정책이 과연 사회가 얼마나 가족과 부모처럼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교육체계를 확보하는가는 향후 기혼성인세대의 추가 출산계획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무자녀, 한자녀, 다자녀집단 간 구별되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출산포기와 출산지속의 결정에 어떠한 맥락과 원인이 작

용하는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층적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 결정에 비해 출산포기의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들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자녀가 없음에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한자녀 출산이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출산포기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 두 집단 간 차이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출산율의 원인을 찾고 효과적인 출산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 135-144.
- 공미혜·이수연(2012). 무자녀 부부의 결혼생활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23-44.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권영인(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 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51-268.
- 김정미·양성은(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박수빈·김희화(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5), 79-89.
- 박시내(2020). 첫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가구. KOSTAT 통계플러스, 2000년 봄호, 18-41.
- 배광일(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자녀수에 따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31-53.
- 배광일·김경신(2011). 생태학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23-149.
- 배광일·김경신(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 연구, 43(3), 239-266.
- 배정연·홍석자(2010).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1), 131-150.
- 배혜원(2017).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51, 86-100.
- 서정연·김한곤(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38(3), 1-24.
-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관점에서 본 출산 연기의 맥락과 정책적 제언. 가족과 문화, 27(1), 271-303.
- 송다영(201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페러다임. 페미니즘연구, 13(1), 93-129.
- 송다영·백경훈(2020).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6(1), 175-209.
- 송유진(2014).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39-347.
- 신인철(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 양영철(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7, 129-164.
- 유계숙(2009). 저출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이명석·장한나·이승연·민연경·최상준(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주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2), 29-64.
- 이미옥·명성준(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331-350.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가족.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이삼식(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2019).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완·채재은(2017).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65-78.
- 이철희(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장한나·이명석(2013).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4), 425-438.
-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족과 문화*, 27(1), 271-303.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211-228.
-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 최지훈·안선희(2018). 가족친화제도와 남편의 자녀돌봄 참여가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75-85.
- 통계청(2020). 2020년 3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2662\\_1&rs=/assist/synap/preview](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2662_1&rs=/assist/synap/preview) 2020년 7월 31일 인출함.
- Anderson, T., & Kohler, H. P. (2015). 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 Duvander, A. Z., & Andersson, G. (2006).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bearing. *Marriage & family Review*, 39(1-2), 121-142.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cDonald, P.(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 Mills, M., Mencarini, L., Tanturri, M. L., Begall, K.(2008).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tentions in Italy and the Netherlands. *Demographic Research*, 18(1), 1-26.
- Yang, S., & Rosenblatt, P. C. (2008).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s*, 29(5), 571-591.

- 논문접수 11월 4일 / 수정본 접수 12월 9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 교신저자: 강유진,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yoojin528@chongshin.ac.kr

## Abstract

### A Study on Family Planning Types and Related Factors among Young Married Women in Korea

Yoojean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versity of family types planned by young married women and what factors affected these types. From the data of 'the 2018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1,933 married women aged 25-39 with one child or no child were analyzed. First, a 'one-child family' was the most common type.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ne-child family type' and the others differed. Third, the factors that consistent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istinguishing family types were those related to family values. Family groups planning additional birth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the traditional aspect regarding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values. On the other hand, childless groups were less supportive of emotional child values than the 'one-child family' and had a higher awareness of equity between couples, showing more marital-centered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policies should create comprehensive plans in cooperation with various areas such as family values and work-family balance for individuals of all ages, non-child families, schools, and workplaces, in addition to families with children.

Keywords: family planning types, family values, future policies